



사회적 파급효과

- 가족기능 약화 및 다양한 복지 요구 폭증
가족기능 약화, 가족복지의 국가·사회 공동부담 전환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 폭증
-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 증가
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부담 증가, 부담의 적정성·형평성 논란 등 세대간 갈등 내재



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세 갈래길

프랑스식 접근	스웨덴식 접근	독일식 접근
출산장려 - 적극적 재정 투입	여성인력활용-일가정양립, 보육, 성평등	이민수용 (최근 정책전환 - 출산장려)

외국 정책 경험

KIHASA 한국노년사학연구원

북유럽 스웨덴, 1.91('08)	볼어권 프랑스, 2.00('08)	영미권 미국, 2.12('0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사-육아의 남녀분담 · 일-가정 양립 지원 · 자녀양육의 경제적 지원 · 육아 인프라 ·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· 이민의 사회적 수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사-육아의 남녀분담 · 일-가정 양립 지원 · 자녀양육의 경제적 지원 · 육아 인프라 ·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· 이민의 사회적 수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노동시장 유연화 - 일-가정양립 용이 · 저비용 민간보육이용 활성화 ·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

외국 정책 경험

KIHASA 한국노년사학연구원

독일어권 독일, 1.38('08)	남유럽 스페인, 1.46('0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성문업적 역할규범 유지 ·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 · 일-가정 양립 관련 및 지원 미흡 [노동시장 경직화]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졸여성 40% 출산 포기 · 자녀 육아 교육비용 지원 미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족수당의 소득대체를 저조 · 보육서비스 부족(0~3세아 대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톨릭문화 영향으로 성문업적 역할규범 유지 ·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극적 수용 · 일-가정 양립 관련 및 지원 미흡 [노동시장 경직화] · 청년의 자립 곤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5세 이하 실업률 30%, 높은 주택가격 · 자녀 육아 교육비용 지원 미흡 · 공적 보육시설 부족 · 빈곤층 복지위주의 가족정책 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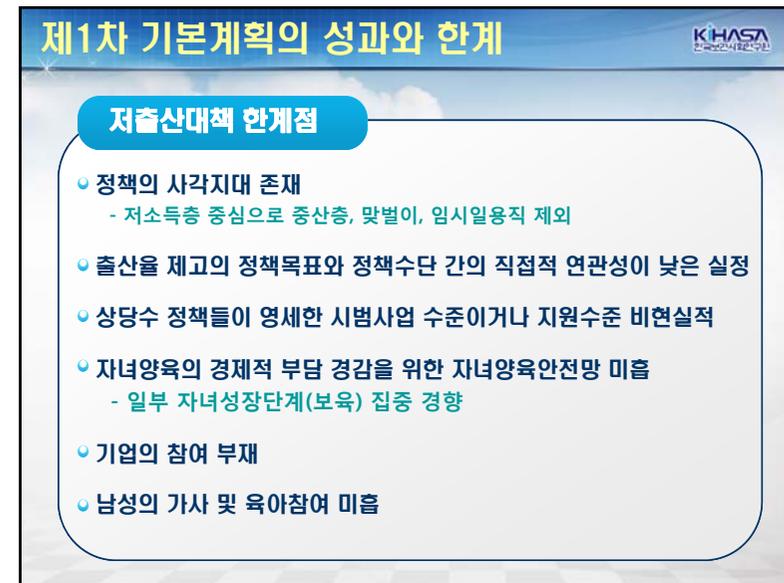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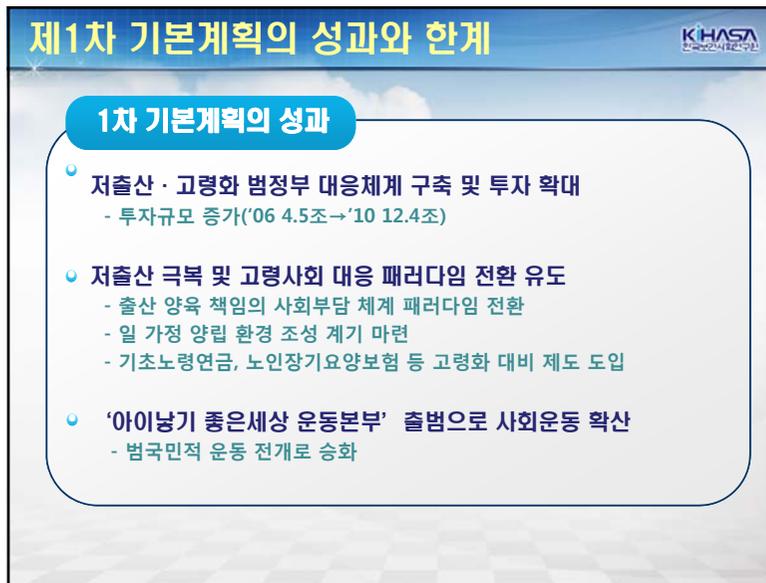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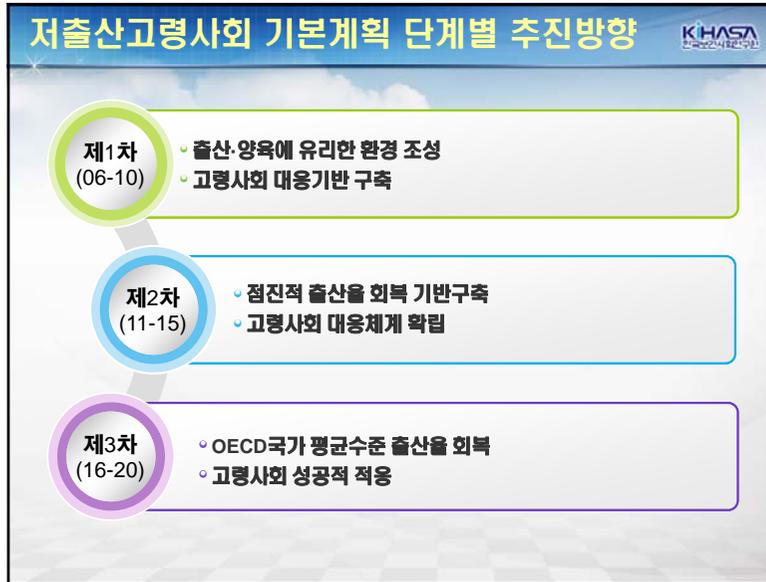
외국 정책 경험

KIHASA 한국노년사학연구원

일본 1.37('09)	싱가포르 1.2('06) 대만 1.1('06)
<p>차진(전)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-가정 양립 제고(근무방식 개선) · 육아인프라(보육서비스 다양화) · 경제적 지원(아동수당) ·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· 청년층 안정화-자립 정책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-가정 양립 지원(육아휴직) · 육아인프라(시설보조금, 외국인 가정부) · 경제적 지원(조부모 보육급여 지원) · 가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· 결혼지원(주택 지원)
<p>한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동아시아적 특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부장적 유교문화 영향으로 성역할 규범 지속 -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부족(장시간근무 관행, 노동시장 경직화) - 다양한 가족형태(동거, 미혼모)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도 · 일-가정 양립지원 미흡 · 적기에 종합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함(단편적 정책 추진) · 권장-계몽 위주 비예산사업의 한계 	

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

KIHASA 한국노년사학연구원



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



고령사회대책 한계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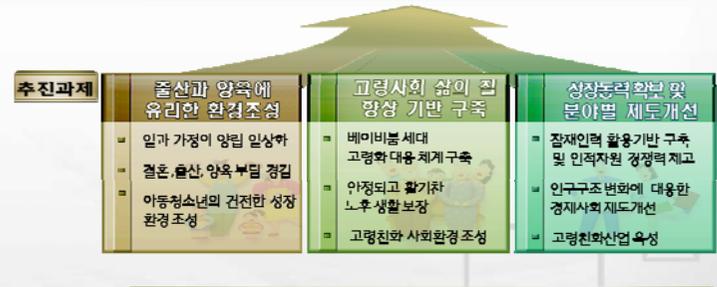
- 사후적 노인복지정책
- 65세이상 노인과 취약노인 중심 지원
- 기본생활보장 중심
 - 기본소득, 건강보장 등 기본육구 충족에 집중
-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
-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건강정책과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정책적 관심 부족
- 노인장기요양의 양적 인프라 확보에 초점

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11-2015)



비전 ▶ 저출산고령사회 성공적 대응으로 활력있는 선진국가로 도약

목표 ▶ 2011-15: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
2015-30: OECD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효과적 대응



추진과제

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과 가정이 양립 일상화 ▪ 결혼·출산·양육 부담 경감 ▪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	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구축 ▪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보장 ▪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	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▪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▪ 고령친화산업 육성
--	--	---

추진기반 ▶ 교육충보 강화 및 민간부분의 적극적 참여 유도
법적·제도적·재정적 기반 강화

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(2011-2015)



제1차 기본계획

제2차 기본계획

구분	제1차 기본계획	제2차 기본계획
저출산	[주요대상] 저소득층 [정책영역] 보육지원 중심	•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• 일가정양립 등 종합적 지원
고령사회	[주요대상]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[정책영역] 소득보장, 요양보호	• 50세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• 소득, 건강, 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
공통	[추진방식] 정부주도	• 범사회적 정책 공조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



일 가정 양립 일상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▪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▪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	결혼·출산·양육부담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가족형성 여건 조성 ▪ 임신·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▪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▪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	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▪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▪ 안전한 아동·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▪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
---	---	--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입과 가정의 양립 이상화

- 1-1.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
 - 육아휴직제도 개선
 - * 정액제 → 정률제(조기복귀인센티브)
 - *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(50% → 60%)
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
 - *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법제화, 육아기근로시간 계좌제
 - 산전후 휴가 등 제도개선(분할사용 허용)

- 1-2.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
 - 유연근로시간제 확산(공공부문부터 확대)
 -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(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조정)

- 1-3.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
 - 직장보육시설 활성화(설치기준 완화,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)
 - 가족친화기업인증제활성화 (인증기준 개선, 인센티브 확대)
 -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결혼·출산·양육 부담경감

- 2-1.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
 -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(대출기준 2,000만원 → 3,000만원)
 -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
 - * 현역입영 대상 유배우자+현역병의 배우자 출산시
 - * 국공립대기숙사 기혼자실 설치, 저소득기혼자 국가장학금 우선
 - 결혼 관련 교육,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
 - * '결혼누리' 사이트 운영,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

- 2-2. 임신·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
 - 임신·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
 - * 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설립 비용 지원
 - * 대학병원 내 신생아집중치료실 확대('10년 3개소)
 - * 자연분만 수가 인상 등
 - 임신·출산 비용 지원 확대
 - * 체외수정 시술비 100%(300만원)까지 확대
 - *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(30만원 → '12년 50만원)
 - 모성·영유아 건강관리 강화
 -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결혼·출산·양육 부담경감

- 2-3.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
 -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
 - *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('12년 소득하위 70%)
 - * 맞벌이 소득산정기준 완화(낮은소득 25%→부부합산 25%감액)
 -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
 - * 둘째아부터 고교수업료, 둘째이상 대학생자녀 장학금 우선
 - * 셋째아부터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(공무원 최대 3년)
 - * 다자녀가정 추가공제 확대(2자녀 50→100, 초과 100→200만원)
 - *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상향(3%→5%),
 - * 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율 인하(4.7% → 4.2%)
 -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
 - * 공교육 내실화, 입시제도 선진화, 사교육 대체서비스 강화, 학원운영 관리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결혼·출산·양육 부담경감

- 2-4.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
 -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
 - * 농어촌/ 취약지역 우선설치, 소규모 시설 확대
 -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
 - * 평가인증제 개선, 우수시설 공공형/자율형 전환 허용
 -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
 - * 저소득·맞벌이가정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권
 - * 운영시간 반일제/종일제 등 다양화
 -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
 - * 취업모자녀 등생시간 지원 확대
 - * 영아종일제 돌봄지원 확대(현 12월 이하, 소득하위 50%)
 -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
 - *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
 -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
 - * 사회적 기업 육성, 보습학원 전환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**아동·청소년의
건강한
성장환경 조성**

3-1.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

-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
-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
- 위기 아동·청소년 자립지원 확대
- * 두드림존(Do Dream Zone) 연차적 확대

3-2. 아동·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

- 아동·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
- 취약계층 아동 인적네트워크 형성
- * 1:1 멘토링 휴먼네트워크 지원
-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
- * 중소규모의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
- * 국제교류, 자원봉사 등 글로벌 활동·문화체험 지속 추진

저출산 부문 세부정책



**아동·청소년의
건강한
성장환경 조성**

3-3. 안전한 아동·청소년 보호체계 구축

- 아동·청소년 생활안전 강화
-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
- * 초등학교 CCTV 조기 설치,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·공개제도 강화 등
- * 성폭력 피해자 보호·치료를 위한 전담센터 확충(15년까지 5개소)
-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
- *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시·군구별 단계적 확대(현재 44개소)
-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
- * 초등학교생 「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」 대책 추진
- *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Wee프로젝트 인프라 구축; 아동안전지킴이 확대
-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
- * 음주정지지역 및 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지정·확대,
- * 학교 주변지역(200m)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

3-4. 아동정책 추진 기반 조성

-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
- 정기적(5년 주기)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

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



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	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	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■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■ 노후생활 실계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자리 확충 및 체계화 ■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■ 의료보장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적정화 방안 마련 ■ 다양한 사회참여, 여가문화 기회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고령친화적 주거·교통 환경 개선 ■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건 기반 마련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

**베이비붐 세대의
고령화
대응체계 구축**

1-1.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

- 고령자 고용연장
 - *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요건 완화
 - : 근로자 대표 동의 → 단체협약/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도입시 지급
 - * 정년연장장려금 정년 폐지시 지급(현 정년연장시 지급)
-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
 - * 고령자인재은행 확대(10년 52개소 → 15년 60개소)
-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
 - *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(10년 32천개)
 - *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운영
-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
 - * 퇴직 과학기술인력(3년간, 1인당 연960만원~1,920만원) 및 대기업 인력(1년간, 1인당 월60~120만원)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
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정착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

베이비붐 세대의
고령화
대응체계 구축

1-2.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

-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
-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
 - *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확대
-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
 - * 퇴직연금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
 - * 확정급여형(DB형) 사외적립비를 상향, 소득공제 확대

1-3.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

-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
 - *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('09년 66%→'15년 73%)

1-4.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

- 노후설계 기반조성
-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

안정되고
활기찬
노후생활 보장

2-1.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

-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
 - * 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
 - *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('11년 14개) 및 시범사업
- 일자리 사업 체계화

2-2.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

- 무연금·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
 - * 국민연금과 재구조화 방안 모색
-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
 - *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개선(연령별→소득수준별 감액)
 - * 연금수급 연기 범위 확대, 연기가산금 인상(1년당 6%→7.2%)
-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
 - * 농지연금 시행('11년)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

안정되고
활기찬
노후생활 보장

2-3.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

-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
 - *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
 - * '12년 목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 검토
 - * '11년 골다공증 및 '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
- 지매노인 관리체계 구축
 - *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,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
- 장기요양보험 내실화
 - *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, 보험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
-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
- 의료비 지출 적정화

2-4. 다양한 사회참여-여가문화기회 제공

-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
-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
 - *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급(1인당 5만원)

고령사회 부문 세부정책



고령친화적
사외환경 조성

3-1. 고령친화적 주거-교통 환경 조성

-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
 - *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(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%(비수도권 3%))
-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

3-2.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

-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
 - *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('10년 146천명)
- 학대노인의 보호강화
-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



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	인구조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	고령친화 산업 육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■ 외국인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■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■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■ 고령화에 따른 주택 및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■ 국내외 시장 활성화 ■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

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

1-1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

- **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**
*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A)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부여방안 논의
- **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**
* ONE-STOP 취업지원 서비스 실시

1-2. 외국인 동포,외국 인력활용

- **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지**
*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*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
- **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**
* 고용변동 신고 간소화 및 선발기준 다양화
- **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**
* 다문화가족 이해제고를 위한 학교교육 실시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

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

1-3.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

- **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**
*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('14년까지 15백명) 확대
*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('11년)
- **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**
*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,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
* 평생학습계좌제 확대(학습자 수 '11년 2만명 → '15년 5만명 확대)
- **평생학습 인프라 구축**

1-4.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방지

- **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**
- **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**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

인구조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

2-1.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

- **교육분야 제도개선**
* 중장기('08~'15) 교원수급계획' ('07년) 수정·보완
* 기존학교 이전, 소규모 학교 통합 등 적정화 방안 마련

2-2.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

- **주택분야 제도개선**
*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('13년 ~ '22년) 수립
- **금융분야 제도개선**
*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

2-3.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

- **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**
*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(Paygo 원칙) 도입 등
* 재정건정성 관리시스템 개선 및 신규 세원 발굴

성장동력 부문 세부정책



고령친화산업
육성

- 3-1.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**
 -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
 - 고령친화제품(서비스) 표준화
 - 고령친화제품(서비스) 지정·표시제도 확대
- 3-2. 국내외 시장 활성화**
 - 국내 수요기반 확충
 - * 지역사회밀착형 전시·체험관을 운영
 -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
 - *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
- 3-3.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**

저출산현상 극복 중장기방안



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master-plan 수립필요



감사합니다

